

2018년 경제 전망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조건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한국 경제는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것 같은 요인들이 많았다. 수출은 2년 연속 감소를 이어가다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었다. 세계경제가 지금 보듯 신속히 회복되리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요와 가격이 이렇게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었다. 조선업 사정은 악화일로였고 이미 20% 이상 줄어든 조선업 종사자에서 다시 20% 이상 줄어들 것이 자명해 보였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자 8.25 조치 11.3 대책 등 잇따라 규제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조정과 함께 건설경기도 위축될 것으로 보였다. 청탁금지법은 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무엇 하나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2017년 경기는 마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듯 달아올랐다. 조선업의 어려운 사정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반도체 장비업체의 호황에 압도되었다. 세계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수출과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졌다.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이다. 부동산 가격도 상승일로를 걸었다. 성장률이 당초 예상하던 2.5%를 크게 뛰어 넘어 3%대로 안착했다. 취업자 수 증가도 31.7만 명에 이르렀다.

올해의 입춘지절에도 안 좋은 소식은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발하며 WTO의 판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장벽을 쌓고 있다. 한국도 보복관

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미 수출 위축을 반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훨씬 많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유럽 경기도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장벽이 높지만 전체 파이가 커져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개방도 높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부상하는 동남아 시장도 든든한 배경이다. 그러니 수치로만 보면 노동시장 성과도 2017년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의 기운이 극하면 음의 기운이 일어나는 법이다. 경기확장이 무한히 이어질 수는 없다. 한국 경제는 현재 2013년 2/4분기부터 확장 국면에 있다. 만 4년 가까이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의 경기변동기 중 가장 기나긴 확장기 역사를 쓰고 있다. 세수(稅收)도 2017년까지 연속 3년 풍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 또한 2009년 6월 이후 확장 국면에 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러한 확장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시기의 조짐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 찾아올 수도 있다. 달리 말하자면, 비록 경기전망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올해는 경기하강과 노동시장 악화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사람이나 경제나 시절이 좋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나라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 단순히 수출 증가나 내수 진작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생산성 증가율은 6년째 취업자 증가율을 밀돌고 있다. 이러서는 일자리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청년층의 미스매치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성장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어젠다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추상수준이 높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는 지나치게 뜬금없고 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삼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데 더 힘을 쏟고 있다.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해서 결정한다는 철학을 버렸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노동규범들도 개선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들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이나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관련 조항들도 시정되어야 한다. 적응력 높은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손봐야 할 규범들은 많다.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유급주휴, 퇴직금, 사회보험 혜택이 '도 아니면 모(all or nothing)' 식으로 주어지는 근로자 보호규범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순간적 노동비용 절약을 위해 3개월이나 10개월 단위의 계약 갱신, 12시간, 14시간 50분 계약이 스스럼없이 행해지는 노동시장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저해하고 있다. 주휴를 무급화하고, 휴일, 휴직, 퇴직금, 사회보험 혜택을 모두 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함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하고 건전한 노동시장 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주휴를 무급화하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상태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인상된 수준보다 최저임금을 더 올릴 여력이 기업에 생길 것이다.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 직무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책 발상이 두고두고 평가받으려면 정규직화 그 자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급 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전통적 근로감독이 불식할 수 없다면 좀 더 과감한 접근으로 공정한 노동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노무도급 거래의 불공정관행을 당사자 고발주의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사법부에서 다시 시작함으로써 5심제로 굳어져 가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해조정 관행은 공정성과 효율성, 어느 견지에서 보더라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와 정부는 2018년을 바로 이러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체질이 강화되어 생산성이 증진되고, 언뜻 앞으로 밀리는 듯이 보여도 뒤로 남는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청년층 고용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것이다. 2018년은 바로 올해를 넘어 경기상승이 확장되고 생산성 증진으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는 해여야 한다. 그 위중함과 절실함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의 위중함과 절실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KL**